

第282回國會
(臨時會)

일자리創出및中小企業競爭力 強化特別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4月30日(木)

場 所 知識經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현안보고(일자리 창출 관련)
 - 가. 국무총리실
 - 나. 기획재정부
 - 다. 노동부

審査된案件

- 1. 현안보고(일자리 창출 관련) 1
 - 가. 국무총리실
 - 나. 기획재정부
 - 다. 노동부

(09시53분 개의)

○**委員長 金容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국회 제4차 일자리창출및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이계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金容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문국현 위원님께서 새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지요.

○**문국현 위원** 반갑습니다.

원내 교섭할 때 일자리특위를 만들기로 합의를 하면서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위와 통합 운영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시고 또 우리 정부에 계시는 고위공직자 모시고 고용률 목표가 있는 나라, 또 고용률 목표를 지원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기획재정부

다. 노동부

(09시55분)

○**委員長 金容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 창출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철국 위원** 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容九** 예, 최철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철국 위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것은 현 경제위기를 타파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들을 보면 다른 부처는 장관이나 책임자들이 와 있는데 기재부장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인 알기로는 전혀 통보도 없이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들한테 협의도 없이.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도 구두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이런 자리에 안 오고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1. 현안보고(일자리 창출 관련)

가. 국무총리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반드시 협의하고 가야 되는 게 도리입니다.

평소에 지금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 경시하는 풍조가,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도 평소에 국회를 경시하는 그런 발언을 여러 번 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증이라도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오늘 이 회의를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일자리 창출하는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고 또 이슈기 때문에 회의는 진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기재부장관 불참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질책과 아울러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容九** 예, 최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 국회법 규정 제121조3항에 보면 해당 장관님이 출석을 못 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장이나 간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동의를 얻음으로써 대리출석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조금 늦어진 것도 사실은 기획재정부장관님 출석 문제 때문에 저희들끼리 논의를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 물론 요즘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심에 있다 보니까 너무도 많이 바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밤 10시 가까이 행정실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전화가 와서 통보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2차관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돌아가시면 장관님께 이 위원회에서의 유감의 뜻을 분명히 전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논의의 모두에 기획재정부는 다음에 날을 받아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오늘 그대로 진행하기로 위원들께서 양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容九** 그리고 특히 특별위원회가 여럿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아마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대책특별위원회에, 4월 1일 본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주 태산 같은 과제를 저희 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일자리 창출 관계로 회의를 하는 첫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도 참석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무 부처인 노동부장관님이 대표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동부장관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존경하는 김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창출및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국민들의 일자리 걱정이 큰 이때 여러 위원들께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4%대에 이르는 가운데 여성, 청년과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부처 간 협조를 공고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투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대책 추진과정에서의 중복, 낭비, 비효율을 없애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를 계기로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고용정책관으로 하여금 정부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 노동부고용정책관 이재갑입니다.

정부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 일자

리대책 추진체계, 금년도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용동향은 '08년 12월 이후 전체 취업자 규모가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취업자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크고 건설업, 도·소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9000명 감소하고 실업자는 4만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09년 3월 현재 실업률은 4.0%, 그리고 실업자 수는 95만 2000명입니다.

비경활인구는 3개월 연속 증가폭이 50만 명을 넘어서서 체감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쪽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경기지표에서 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는 있지만 다수의 실물경제 지표에서는 침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경제 침체, 글로벌 금융시장 등 대외여건이 취약해서 수출 부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주요 기관에서도 하반기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은 경기의 후행변수로 경기가 회복되어 고용여건 개선으로 연계되는 데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여건은 당분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실업률이 예상보다 상승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금번 금융위기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등의 영향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에 비해서 상용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 폭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사점을 보면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자가 123만 명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된 반면에 금번 고용위기 시에는 실업자가 아직까지는 12만 명 증가하는 등 비교적 점진적으

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용 악화에 따른 어려움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서 임시·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취업자 감소 폭의 76.4%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효과도 조금씩 가시화되어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인턴,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쪽 일자리 대책 추진 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의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관계부처 합동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를 구성해서 고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지원하고 각 부처별로는 고용대책 상황실을 구성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대책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일자리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취약계층 대상 일자리를 신속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인턴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분야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등 실직자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단기 일자리 제공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 확충 및 R&D 투자 확대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지방경제 활성화, 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개량 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말 기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4월 말 채용인원은 35만 명으로 목표 대비 채용률 8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부문의 일자리 나누기 지원 및 확산 유도를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서 소득공제 및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의 특례 도입 등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로는 개별기업 단위에서는 자사 실정에 맞는 방법을 노사가 협의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고 지역단위에서는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체를 통해서 실천방안을 마련·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중앙 단위에서는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이행점검반을 운영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1151억 원이 지급되었고 재직자 능력개발을 위해서 1688억 원 그리고 근로자수장 지원금으로 215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1624개소가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서비스 및 실직자 생계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발굴해 연계하고 취업상담 알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업지원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미래산업에 필요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기업의 인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 관련 지원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혜 확대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가고 그리고 실직가장 생활안정자금 등을 통해서 실업자의 생활안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고용지원 인원은 26만 명으로 목표대비 52.2%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72만 명 등 실업급여·생계비 지원은 목표 대비 54.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9쪽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총 4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는 약 40만 개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에서는 약 29만 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일자리를 약 40만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25만 명 규모로 실시하고 방과후학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만 5000명 규모를 확대하고 그리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근로의욕 및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인턴 등 채용 규모를 6만 5000명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턴 채용 시에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초·중·고교 학습 보조 인턴교사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3653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49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고용유지를 위해서 교대제 전환을 실시하는 경우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182억 원이 또한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서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학내 교육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하고 그리고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약 10만 명 규모로 신규로 실시하고 실업자 직업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도 확대되었습니다.

11쪽, 실직자 등 생계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실업급여 예산은 1조 6000억 확충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 그리고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장려금 지원 수준을 인상하였으며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취업장려수당을 1년간 한시적으로

월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의 2분의 1을 1년간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12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의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임금 지급액은 1일 3만 3000원, 월 8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현금 50% 그리고 상품권 50% 지급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대상사업은 단순 취로사업은 배제하고 주민편익이 남는 생산적 사업 위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 일자리 대책 점검·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대책 집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상황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처별 또는 부처 합동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예산집행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서 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사업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에 대해 종합적·체계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정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체계적인 자문 및 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을 일자리대책 평가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해서 사업장 단위 양보교섭 확산을 지원하고 일자리 나누기가 범국민적 위기극복 실천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容九**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총리실, 노동부, 기획재정부 3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시간은 1차 10분이고,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2차 질의는, 꼭 필요하신 분에게는 2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李珍福 委員**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는 뒤에 하고요.

방금 노동부에서 보고해 주셨는데 먼저 하나 여쭙어 봅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하시는 내용들을 죽 보니까 단순노동도 아니고 조금 더 기술을, 조금은 요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과거부터 해오던 공공근로사업들 보면, 지금 보증을 어떻게 들 어놓으셨습니까? 혹시 이분들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지요?

누가 이거 담당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국장 한석규**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입니다.

○**李珍福 委員** 행정안전부요?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국장 한석규** 예, 제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李珍福 委員**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시지요.

보증이 다 들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국장 한석규** 4대 보증을 본인도 부담하고 사용자 측에서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李珍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3월 25일 날 경실련에서 발표한 이명박 정부 일자리 대책 분석에 보면 말이지요. 지난 1년간 정부에서 발표한 일자리 대책 중에 중소기업 수혜는 정작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보고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李珍福 委員** 그렇습니까?

밑에 직원들이 잘못 보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모든 시민단체의 그런 발표 내용을……

○**李珍福 委員** 보통 시민단체가 아니고 적어도 경실련 정도에서 나온 자료 정도는 장관님이 한

번쯤은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1.4%밖에 안 돼요. 중소기업 수혜 주는 것이, 거의다가 대기업이고 건설업 위주고 말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무엇의 1.4%라고 한지 모르겠는데요.

○**李珍福 委員** 그러면 말이지요, 제가 2009년 3월 25일 날 발표한 이 자료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용보험 사업에서 일자리 부분에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한 게 있는데 그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비중이 중소기업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라는 게……

○**李珍福 委員**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경실련에다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알겠습니다.

○**李珍福 委員** 그래서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잘못된 자료는 바로잡는다든지 그런 뜻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李珍福 委員** 다음 기재부차관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노동부에서 보고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30대에서 40대까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들에 대한 실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고요, 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준다 하는 정도의 내용보고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30대에서 40대의 가장들이 사회로부터 자꾸 버림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예산을 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정확하게 저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큰 부담으로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차관님의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가장의 실직은 한 가정이 굉장히 피폐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장을 하루빨리

일터에 복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실업자 훈련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경제가 회복될 때 어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좀 확보해 주는 제도로 그쪽으로……

○**李珍福 委員** 잠깐만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차관님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해서 지금 잡(job)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거의 다가 기술이 있는 사람을 찾지 기술이 없고 서비스업이나, 진짜 기술이 없어도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전공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엔지니어들이 아니에요. 사실 인문 분야의 공부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안정적 직업에 대해서는. 뭐 공공근로 이런 것은 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비스업이나 기술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작업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은 그 수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정확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데 따르는 가장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요즘 주부들이 밖에 나가서 벌고 남자들은 집에서 애를 보는, 가사를 돌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긴 것도 우리 교육의 어떠한 비중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이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기획재정부차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상속세가 과거보다는 20%에서 40% 좀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 시장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 만나 보면 좀 계속해서 사업을, 가업을 계승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상속세에 대해서 지금 부담이 높은 것을 좀 더 낮춰 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던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저희들이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인하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업상속세에 대해서는 일부분 낮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효과를 다음에 다 분석해서 전반적인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는데,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찬반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李珍福 委員** 그건 좋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기업 상속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또 인하했고 또……

○**李珍福 委員** 그런데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기업을 그나마 연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노하우들이, 축적된 기술들이 사장되고 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울 적에는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알겠습니다.

○**李珍福 委員** 우리 총리실장님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중앙회가 각 지역본부를 통해서 실시한 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위기대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방정부의 중기 지원대책에 대해 절반 이상이 현장에서 아주 불만을 많이 느끼는 걸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보고라든지 현황에 대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李珍福 委員** 그런데 우리 노동부장관님도 참 중소기업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요 앞에 우리가 지식경제부 또 중소기업청하고 할 적에 참 많이들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광주·전남지역은 61.6%가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은 53.5%고요. 경남지역은 59%고 인천지역은 65%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총리실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중소기업이 그림의 떡으로 보는 이런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정말 언론이 ‘뭐 하노’ 소리하기 전에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납득이 어렵습니다.

특히 시장에 가서 물어보면 은행은 은행대로 대출 안 해 주지요. 물건 팔 곳 없지요. 물건 쌓여 가지고 처리할 방법조차도 없지요. 원화는 계속 상대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어렵지요. 온갖 것이 주변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장애적 요소들밖에 없는데 정부가 너무 현장의 소리들을 안 듣는 것 아니냐, 하여튼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장관님들 보고 현장을 가라는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정말 현장에 가면 문제점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총리실장도 현장에 가서 가지고 각 부처 간에 어떻게 해서 화음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총리실장님이 현장을 어디 가셨다는 이야기를 별로 못 들었습니다. 총리실 직원들은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조정하셔야 되는 실장님이 현장을 못 갔다는 이야기는 저는 문제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좀더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만드시기를 바라구요.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이, 특히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신기술을 가지고 입찰하는 데 전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중소기업들이 기술 하나 개발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대기업들에 의해서 이런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한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상 건설

신기술 우선보호제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꼭 보호받을 수 있는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이 결과를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珍福 委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容九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운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운대 위원 일자리 정책을 총괄적으로 총리실에서 하나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태스크포스는 총리실에 있습니다.

○강운대 위원 지금 마이너스 일자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추세가 언제까지 가리라고 봅니까?

3월 말에 마이너스 19만 5000개, 4월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당분간 세계경제가 어려워져서 저희 경제……

○강운대 위원 거두절미하고, 대략 언제까지 계속 마이너스가 가리라고 봐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정확한 추정은 어려울걸로 생각합니다.

○강운대 위원 우리 노동부에서는 그런 판단 안해요? 마이너스 일자리가 언제까지 가리라고 보느냐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금년도 전체의 일자리 감소가 20만을 예상하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아주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괄적으로는 하여튼 취업자가 20만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금년에 예상을 합니다.

○강운대 위원 우선 그러면 4월 말이 되면 실업자가 100만이 넘게 되겠네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현재 예상으로는 앞으로 고용 동향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에 95만 2000명이어서 현재 추세로 보면 고용은 항상 경기에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강운대 위원 그러면 상반기까지 가 보면 대략 20만 개, 20만 개 하면 한 백사오십만 개까지 실업자가 생겼다가 하반기에 플러스로 돌아서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0만 개량……

○노동부장관 이영희 평균 20만 개 정도로 예상됩니다.

○강운대 위원 재정부차관!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강운대 위원 그 외에 추경효과 분석을 보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금년에 상시적으로 연평균 플러스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윤장관 부임한 이후에 마이너스 20만 개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20만 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 전망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저희들이 일자리는 추가적으로 한 20만 개를 만드는데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실업자 수는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실업자는 현재 취업자가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저희 말하는……

○강운대 위원 아니 아니, 결론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0만 개로 전망을 했었는데 정부가 내놓은 추경효과 분석을 보면 추경 4조 원을 통해서 플러스 20만 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야. 전망이 전년 대비해서 제로 상태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그것은 경제정책 국장이 조금……

○강운대 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 국장한테 답변 들으려는 것 아니고……

자, 또 묻겠습니다.

우리 총리실의 권 실장!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강운대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고용률을 현상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굴러가려면 전년 대비해서 연간 몇 개 정도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져야 됩니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제 생각에는 1% 성장에 한 7만 개니까 한……

○강운대 위원 1% 성장 문제가 아니고, 아니,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400만 개 일자리인데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전년 대비해서 계속 일자리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몇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야 현상 유지가 되느냐고, 현상유지가.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운대 위원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운대 위원 그거 어떻게 돼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강운태 위원 고용률을 현상으로 보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한 57.9%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현재의 고용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간 25만~30만 개 정도는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운태 위원 30만 개는 상식입니다, 상식. 생각해 보세요.

지금 15세 이상 인구가 매년 45만 개 늘어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30만 개 일자리는 만들어야 고용률 자체가 현상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총괄하는 부처에서 일자리 보고를 하면서 기본적인 통계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마이너스 20만 개 상태란 말이지요. 3월에 19만 5000개 아닙니까?

두고 보세요. 4월에 마이너스 20만 개 넘을 겁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50만 개 상태란 말이지요. 플러스 30만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마이너스 20만 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0만 개 상태에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나열을 했지만 정말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고요. 이제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를 통한 신성장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일을 하면 경제가 성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통한 신성장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전제하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시는데 애를 쓰시는 분들 특별히 나무라고 싶진 않지만 정부정책이 엇박자예요.

자, 봅시다.

지난 3월 31일 날 공공기관 선진화대책 일환으로 2012년까지 2만 2000개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강운태 위원 아, 선진화해야지요. 경영합리화 해야지요. 그걸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진화의 방법도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가를 절감해라 또는 생산성을 어느 정도 높여라, 2012년까지 또는 2010년까지, 2011년 연도별

로 정해 가지고 그런 생산성 향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CEO를 교체하겠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지요.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라……

그런데 그 공공기관에 인턴사원을 두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규직 잘라 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아빠는 직장 잃고 아들은 인턴사원 들어가고 이게 지금 정부정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는 지금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자, 또 하나 지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이런 게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총리실에서 총괄하셔야 돼요. 이게 보니까 노동부부터 시작해서 교과부, 지경부, 외통부, 여성부, 농진청, 행안부 뭐 관련이 안 된 데가 없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얼마나 거창하고 좋습니까?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계경제가 풀렸을 때 우리 청년들을 밖으로 보내서 취업을 시키지 다들 일자리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이게 성과가 있겠습니까?

자, 노동부!

해외취업 연수 금년에 3682명 하겠다, 예산도 203억을 확보해 냈어. 지금 현재 몇 명 했어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1200명이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1200명이 현재 훈련 중에 있어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운태 위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계보다는 많이 늘어났네.

지금 지난주에 받은 통계는 여러분한테 받은 건데 213명, 5.8%, 그리고 민간 해외취업 알선 1000명 계획인데 실적이 없고, 그리고 교과부의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실적이 전혀 없고, 행안부의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실적이 전혀 없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굳이 하나하나 따져야 하나 시간도 없는데 이런 정책을, 권 실장 말이지요, 총리실이 하는 게 뭐야, 이게? 이걸 따져 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은 바꾸란 말이야, 바꿔.

생각해 봐. 상식 아니겠어? 아니, 전 세계가 지

금 일자리 없어 난리인데 우리 청년들을 아르바이트 비용 좀 주고 해외에다 취업시키겠다, 이게 성공하겠냐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다시 좀 따지기 바라고……

그다음 청년인턴사원제, 노동부차관하고 기재부차관이 좀 답변해야 할 일인데, 지난번에 기재부장관이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 ‘인턴제를 정규직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인턴사원 좀 훈련을 잘 시킨 다음에 정규직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좋은 답변했던 말이지요. 그 이후에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 기재부차관부터……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저희들이 청년인턴제가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채용하는 것,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제……

○강운태 위원 아, 결론만, 결론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에 인센티브를 줘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장관이 답변했다 이 말이야. 무엇하고 있냐고, 지금?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현재 중소기업인턴제는 6개월간 인턴을 하고 채용을 6개월 더 할 경우에……

○강운태 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또 다른 제도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인턴들을 뽑아서 하고 있을 경우에 그 인턴이 그 기업에 채용될 때 여러 가지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그 인턴에 대해서, 숙지된 능력이 다시 자기가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강운태 위원 알겠는데, 그것 서면으로 정리해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세계경제가 계속 안 풀리면 재정을 가지고, 국민 빚 얻어 가지고 계속 국채 발행해서 재정으로 끌고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던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규직을 하나라도 더 많이 채용하고 양성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드린 얘기니까 검토해보시고요.

최근에 일본에서 추경을 했는데 민생안정특구 제도라는 것 봤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추경 15조 엔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민생안정특구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개별사업별로는 제가……

○강운태 위원 그것이 무슨 제도냐 하면 자치단체별로, 경기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침체돼 있는 지역, 특히 고용상태가 안 좋은 지역, 그러면서 지방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를 민생안정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50% 정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금년에 일본에서 추경을 하면서 새로운 제도로 채택했던 말이지요.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나는 고용안정특구 해 가지고 실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지역, 예컨대 광주광역시 같은 데는 5%가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아주 열악한 지역, 그런 지역은 국고보조도 좀 상향해 주고 일자리 창출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그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차관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강운태 위원 그럴 용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예산, 희망근로까지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고용률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만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운태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률이거든요. 실업률과 고용률을 봐 가지고 고용 상태가 안 좋은 지역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하는 얘기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전체적으로 보조율을 바꿀 것인가의 문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용이 낮은 데는 저희들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라 해서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전의 전반적인 보조율 자체를 변경하는, 상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재정자립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고용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九 강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안성 출신 한나라당 김학용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서 직접 하지 않고 154개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김학용 위원** 이 민간 위탁기관들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민간 위탁은 중소기업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경제단체, 사업주단체 또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학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일부 대학교들이 선정이 된 데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대학들이 신청을 했는데 특정학교만 선정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느 지역은 지역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 관련 협회 등이 없이 오로지 대학교만 민간 위탁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차관 정종수** 이것은 저희가 지방청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는데 일단 공모를 받아 가지고 들어온 단체들 중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단체가 되는 데도 있고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신청한 기관에 따라서는 대학들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선정이 안 된 데는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선별해서 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동부차관 정종수**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통해서 선별하는 것이지요.

○**김학용 위원** 누구 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답변해 보세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일단

하겠다는 데를 받아서 선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선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김학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정한 대학에서 자기네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지 다른 학교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대학만 있는 경우에 대학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고등학교 출신들에 대해서는 청년인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대학만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자기 학교로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대학도 있고 경제단체도 있고 또 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김학용 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부 지역은 다른 데가 다 배제가 되고 오로지 대학교만 민간위탁기관으로 된 데가 있잖아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저희들이 배제를 했다고보다는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커버하는 부분을 중앙에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한 부작용이 없게끔 각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에게는 인턴 1인당 6개월 기준으로 35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확인점검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예, 그렇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러면 평균 40만 원 잡으면 2만 5000명 계산하면 한 100억 정도가 위탁기관에 가는 금액이 되거든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예, 그렇습니다.

○**김학용 위원** 어제 추경 심의에서 청년인턴제

예산 297억 삭감됐지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예.

○**김학용 위원** 그러면 이런 마당에서는 사업운영구조를 변경해서 보다 많은 인턴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없으세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기본적으로 인턴 부분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새 고용상황이 나쁘고 해서 실업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분들의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서 저희 인력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학용 위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요, 차라리 인턴을 고용지원센터에다가 배치시켜서 최종적으로 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00억 정도는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용지원센터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81개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독일이나 영국, 일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부족합니다.

○**김학용 위원** 지금 독일이랑 비교하면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만 보면 한 19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개 고용지원센터에서 447명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8300명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래서 고용지원센터를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센터 수가 부족합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는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수를 확대하는 것은 관계 부처 간에 상당한 협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형편상 쉽게 늘릴 수는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력이 부

족한 부분을 위탁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 우선 센터 수도 중요하지만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에도 한 700여 명 정도 인턴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경력도 쌓고 그리고 업무도 보조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총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OECD의 2007년 청년층 일자리 보고서의 권고를 보면 그 하나가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에 대학교들의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하니 취업지원센터 전화번호 정도밖에 파악이 안 돼 있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적은 어떤지 전연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선에 있는 대학의 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교들과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현황 그리고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리를 못 얻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연구원이나 또 다른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대학의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통계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천만다행으로 이번에 보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을 일자리대책평가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려 그랬더니 IMF 당시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지금 전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로우 데이터(raw data)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리고 노동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모아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그렇습니다.

○**김학용 위원** 최근에 한번 접속해 보셨습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모아 시스템은 그동안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등등 이렇게 중복적으로 시행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복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금년도에 개통했기 때문에 아직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어제 들어가 봤더니 정부 주관은 400여 건 정도 올라와 있고 지자체 주관은 150건 정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것을 노동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총리실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부처에서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총리실에서 이것을 이관 받아 가지고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저희들이 TF지만 실제 정규직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각 부처를 모아서 회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아니, 일모아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가져야지 시스템 사이트 구축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끝나면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위원님, 차관입니다.

한 말씀만 올리면요, 지금 일모아 시스템은 하드는, 고용정보원이 온갖 일자리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원에 설치가 돼 있고 그것은 각 부처가 해당되기 때문에 총리 훈령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총리실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학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委員長 金容九** 예.

○**김학용 위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경제위기에 대한 긴급 예산들의 규모와 쓰임새 같은 것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 관련 예산이 하도 몰새듯이 새 가지고 국민들이 과연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 추경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차관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전체 예산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관련 예산이라도 제대로 필요한 수혜자에게 전달되고 집행이 되는지 또 부정은 없는지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사이트를 구축해서 공개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좋은 말씀입니다.

전체 예산도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에서 그런 사업을 자기 홈페이지에 띄우도록 해서 각 국민들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도록 하고 또 노동부와 협의해서 일자리 상태를 어느 한 부처의 홈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어렵사리 이번에 통과된 추경이니만큼 정말 국민들에게 또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九**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성린 위원** 한나라당 나성린 위원입니다.

특위라는 것이 생긴 이유가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법안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또는 여러 위원회나 여러 정부부처가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에 대한 법안을 만든다든지 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다른 상임위에서 질의 응답하는 것처럼 그냥 끝나치고 하면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위에서 뭔가 다른 상임위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법안을 하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

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가 나중에 한 가지 제안할 텐데, 우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조금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지만 고용지표는 아직까지 안 좋습니다. 다른 경제지표가 살아나더라도 고용상황은 아마 한 6개월 이상 있어야 해결될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는 경제지표 중에서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드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정부 일자리는 다 한시적인 일자리입니다, 한시적인 일자리.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지금 국무총리실장도 나와 계시고 노동부는 지금 장관 안 계시고 차관 계신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안 가지 않습니다. 대기업 가기 위해서 5년, 6년 기다리거든요. 이것 사장되는 거예요, 사장되는 거. 중소기업도 좀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대기업에 지원할 때 가산점 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공기업은 우리가 이것을 강제할 수 있지요. 민간기업은 강제는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강력하게 권고를 하면 앞으로 우리 취업패턴이 바뀌지 않을까? 많은 청년들이 일단 중소기업 가서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대기업 가고 하면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취업패턴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요. 중소기업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대기업들이 인턴을 채용해서 인턴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뀌면 인력의 어떤 낭비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총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아이디어 자체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업

에서 채용패턴이 완전히 대학졸업…… 대기업에서 전혀 직업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직업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에도 많이 갈 수 있고 또 대기업에서도 따로 트레이닝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위원** 아이디어는 괜찮다.

노동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민간기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가 경제단체 등등 간담회를 자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권고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위원** 권고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중기특위에서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른 상임위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공동으로 입법발의하면 좋고 안 그러면 제가 한번 입법발의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중기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7월 말 되면, 7월 1일이면 대란이 일어나는데, 100만 대란이니 80만 대란이니 이것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고, 야당에서는 또 과장을 했다고 난리인데 하여튼 일단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1년, 2년.

노동부차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비정규직법안 올라오는 것입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비정규직법안은 상임위에서 수차 논의가 있었습지만 현재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가 사실상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5월에 상정은 안 됐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나성린 위원** 참 답답한 것이 5월, 6월 되면 이미 해고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생길 텐데 이것을 말아야, 고용의 주체는 기업인데 7월이 되도 기업들이 해고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배짱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 안 되면 말입니다, 한나라당의 책임이 아니고 야당의 책

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나 현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이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 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강화 문제에 있어서 저희 당에서는 사회보험료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1년 동안.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특히 임금격차 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6000억 원입니다.

사회보험료 50% 지원하든지 임금격차 50만 원 6개월, 1년 지원해 가지고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어요?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한번 채용하면 그사람들은 10년, 20년 계속 부담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안도, 정부의 원래 안이지요. 사회보험료 50% 지원하는 것도 하고 야당의 안도 한번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되고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추경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일단은 편성은 되었습니다. 정부가 낸 고용보험료, 4대 보험료 감면액과 그다음에 야당에서 제안한 정규직 전환 직접지원금 두 가지를 믹스하고 수준을 낮추고 기간을 줄여서 일단 추경에 반영은 됐고요. 금년도 추경으로 1158억이 반영은 됐고, 다만 비정규직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집행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것도 계속 강조하지만 기업들이 그것 해 준다고 정규직 절대 채용 안 합니다. 영원히 부담을 갖는데……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수단을 우리가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노동부차관님!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이것도 제가 볼 때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워낙 세계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직장들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에 속하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사회적 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는 기관들은 다양합니다. 거기에는 간병인 제도도 있고 돌보미도 있고 환경개선도 있고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작업장도 있고 분야는 다양한데 앞으로는 어떤 지역의 문화 또 환경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나성린 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로 기업을 만들려면,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또는 준공공기관에서 고용주가 되기보다는 그분들이 직접 고용주가 되어서 또는 그분들이 모여서 기업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 아닙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그렇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런데 이런 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최소한도 수익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겠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현재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들은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정부의 지원으로만 일자리를 창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재까지 인증을 한 데는 대개 그런 재정자립도 같은 것을 감안해서, 아직은 충분한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 2, 3년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거기서 생산된 물건도 구매해 주고 한다고 하면 자립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합니다.

○나성린 위원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좋은데,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정부 지원으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수익을 남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차관 정종수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현재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10초 남았는데 한 가지만 하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앞에 문국현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4대

강 유역 개발 말이에요. 이거 며칠 전에 야당에서 낭비적인 사업이고, 여기에 불만이 많습시다. 이 사업은 예산을 철회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도 문화·환경 사업으로써 미래에도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야당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토목사업은 일자리가 창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가 기획재정부차관한테 여쭙게요.

토목사업이 옛날보다 일자리 창출 개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현재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제조업보다는 건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성린 위원** 그래서 4대 강 유역 개발 이번에 들어가면 일자리 창출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상당부분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나성린 위원** 그래서 이것 분명히 해 줘야 될 거예요. 뭐 삽질 등등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어디에서 농담으로 했지만 ‘요새 토목공사 하는데 가면 삽이 있느냐’…… 삽이 없지요, 요새 다 IT화 되고 첨단기술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노동자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게 아니고 관리직도 있고 말이야, 여러 가지 관련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걸 좀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겠고, 제가 볼 때는 4대강 유역은 일단 청계천이나 한강 둔치처럼 완성되고 나면 그 주변에 환경·문화 사업이, 상당히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확신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잠정적인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서 관리직이나 고급 일자리가 한 2, 30% 탄생될 거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인근에 자전거도로라든지 문화·환경이라든지 또 녹지·초지 조성 이런 것인데 그건 기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어차피 많이 생길 걸로 추정됩니다.

○**나성린 위원** 아까 중소기업 취업인센티브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九** 나성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배은희 위원** 연일 이 경제위기에 많은 예산과 계획을 세우셔서 일자리 만들고 지키고 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이신 것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간단한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일자리 창출, 특히 인턴제에 이렇게 많이, 한시적인 일자리에 집중이 됐는데 이 일자리가 한시적이라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한시적이거나 일자리를 가지면서 어떤 커리어(career) 개발에, 그러니까 경력 개발에 이 인턴기간 동안이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복지의 개념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인턴이 와 봤자 복사나 하고 잔심부름이나 하고, 어떤 때는 귀찮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넣으면서 이 인턴기간 동안에 뭔가를 배우게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턴이나 이게 복지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청년 또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인력양성의 일부분이다 하는 개념을 더 많이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제 평가가.

그래서 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평가를 총리 소속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일자리대책 평가센터에서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질적인 일자리 대책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지표 같은 게 지금 나와 있는지 그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드백하고 하는, 평가하는 항목에 이 인턴들의 앞으로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됐는지 또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것도 평가요소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 인턴들이 대답하는 것보다 인턴을 썼던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임기가 보통 9개월, 1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일을 맡기기 좀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고……

○**배은희 위원** 그렇지만 그 각각 일 중에서 단기적인 프로젝트화해서 맡길 수도 있고요.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을……

○**배은희 위원** 제가 외국의 예를 잠깐 설명드리면 벨기에에서 대학생들을 저희와 똑같은 인턴제로 쓰는데요. 벨기에의 각 기업에 한 기업당 2명을 배당해서 세계 각국에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그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기업의 제품을 마케팅하는 그런 일을 무작위로 하라고 하고, 각 나라에 가서 상담을 했던 사람의 명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 명함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벨기에 정부에 보고를 하면 정부에서 그 상담을 당했던 사람한테 직접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잘 했냐, 어땠냐’.

그리고 이 인턴은 그 성과에 따라서, 뭐 그러다가 물건도 팔 수 있고 그 기업에 매출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후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턴기간 3개월, 6개월 끝나고 나서 인센티브를 한 300만 원, 600만 원 주면 그걸 갖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지 예산만 편성하고 예산이 잘 집행됐냐, 아니냐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진짜 예산이 어떤 질적인 효과를 냈느냐를 보는 게 저희가 이 위기를 극복,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났을 때 경쟁력을 우리가 얼마나 진짜 갖게 되느냐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을 확실히 짜서, 지금 지표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없으시다면 앞으로 그런 지표를 만드시도록 좀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아주 당연하시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해외의 사례도 파악을 해 보면 외국의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데서 대학생들 한 3개월씩 여름방학 때 쓰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그냥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턴십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리고 보고하신 내용 3페이지에 보면 여성하고 청년층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감소 폭이 제일 크다고 했는데 청년 중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상당히 고졸 이하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쪽 보면 이 간단한 보고서

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고졸 이하의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에 예산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부차관 정종수** 금년도 청년실업대책 예산이 9600억가량 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 3000억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게 고졸 이하만입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그런데 고졸 이하, 특히 취약청년층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학교를 중도 탈락했거나 이런 학생들, 주로 고졸,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니트족 같은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취업장려수당이라든지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같은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면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 중의 몇 %나 된다고 보시나요?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팔천……

○**노동부차관 정종수** 9600억이고요.

○**배은희 위원** 9600억이면 굉장히 적은……

○**노동부차관 정종수** 금년 추경에서 또 3000억 이상이 확보돼서 1억 2000가량 되는데요.

○**배은희 위원**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그렇게만 따지면 그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실 적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그걸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이 많거든요. 청년의 과반수가 고졸 이하인데……

○**노동부차관 정종수**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일자리도 더 잡기 힘들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 이걸 기회로 그 경력을 쌓는 기회가 또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추진실적, 이게 공공기관 재정을 통한 직간접 일자리 창출의 추진실적이라고 결과를 주셨는데 통계를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평균 84%를 달성했다고 하고 밑에 쪽 개별사업 달성도를 했는데 거기가 다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91%, 103%, 96%, 98%, 83%인데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면 84%가 훨씬 넘어야 되는데 이 통계가 84%로 나왔다면 여기에 예시하지 않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어떤 사업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모르시겠으면……

○**노동부차관 정종수** 저희 같으면 중소기업 인

턴제 같은 경우……

○**배은희 위원** 중소기업 인턴제는 나중에, 그다음 추진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턴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공기관 인턴제보다 그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렇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배은희 위원** 그 이유가 사실 아무리 지원이 된다 해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을 좀 아시고, 이게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제대로 다 집행될 수 있게 현장에 가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다른 인턴과 달리 위탁기관을 모집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2월부터 실질적으로 위탁기관 모집이 들어가서 이제 막 4월부터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인과 구직이, 구인이 2만 5000건이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서 중소기업 인턴제가 활발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 사업의 물량은 지금 같은 속도로 보면 상당히 빨리 소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은희 위원** 지금 벌써 5월, 이제 4월도 다 지나갔는데 예산이 너무……

○**노동부차관 정종수** 2월부터 3개월 후에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 이제 막 시작입니다.

○**배은희 위원** 작년에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배은희 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추경……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라고 하는 사업……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추경이 아니라 예산……

○**노동부차관 정종수** 본예산에 들어 있었습니까.

○**배은희 위원** 본예산에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4월, 4월이 지나서 지금 시작 된단니까 너무 늦게 이게 집행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청받은 물량으로 보면 알선도 통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배은희 위원**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부분에서요, 휴업·휴직·훈련 이런 데에다 지원하게 돼 있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배은희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력양성의 그 개념에도 들어가야 된다면 훈련에도 많이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배은희 위원** 이게 어떤 할당이 돼 있지 않고 신청받는 대로 주다 보니까 휴직·휴업 쪽에 거의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나가는 걸 보면 지금까지 휴직에 60억이 나갔고 훈련에 42억이 나가서 훈련 부분도 상당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배은희 위원** 휴업에는 680억, 휴직은 60억이라는데 저는……

○**노동부차관 정종수** 아, 휴업은 육…… 휴업이 물론 큼니다마는……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그 훈련 부분에 예산 배정이, 집행이 너무 적게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추경에서 또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배은희 위원** 추경을 집행하실 때는, 물론 노동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복지 쪽을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인력양성을 해야 된다는 것도 좀 개념을 많이 넣어주셔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차관 정종수** 저희가 3월 달에 이미 고용보험법시행령을 바꿔서 지금 훈련과 인력재배치 지원 제도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九** 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철국 위원** 최철국 위원입니다.
국무총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몇 차례나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

○**최철국 위원** 한 열다섯 차례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예, 분야별로 여러 번 했습니다.

○**최철국 위원** 그다음에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까, 총 몇 개의 일자리?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그것이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기재부에서 그걸 한번 전부 통계를 다시 산정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철국 위원** 기재부차관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지금 아마 저희들도, 사실상 매번 각 부처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다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한 488만에서 한 500만 사이라고……

○**최철국 위원** 5년 동안 한 500만 개 만들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최철국 위원** 지금까지 일자리는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그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건 최대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국 위원** 하여튼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건 좋은데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너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국민들은 그것만 보고 ‘일자리 많이 잘 만들어지겠구나’ 하다가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로 남아 있고 정부정책 발표해도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강만수 장관 효과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악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큼니다.

일자리 창출 경우도 2009년도에 110만 개 정도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지요? 기재부차관이 답변하는 게 좋나요?

2009년도에 110만 개 정도 일자리 창출되는 것

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여러 정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최철국 위원** 예,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런데 기재부장관은 또 이번에 취업자 수는 한 20만 명만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20만 명 감소……

○**최철국 위원** 그러면 정부대책으로 110만 개 일자리 늘리는 것하고 장관이 20만 개 정도 일자리 감소된다는 것하고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통계가 좀 정밀하지 못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6개월 일자리도 하나, 3개월 일자리도 하나로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발표될 때 그런 어떤 통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통계를 낼 때도 1년짜리 이렇게 통계를 좀 내도록 통계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10만 개라든지 500만 개 일자리라는 것은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게 곧바로 일자리 개수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최철국 위원** 기재부차관께서 솔직히 통계상의 오류, 또 장밋빛 청사진을 너무 제시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새롭게 검토를 하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그만 질문을 하고요.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하는 것하고 인턴제 채용하는 것하고는 존경하는 강운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엇박자 정책이라고 봅니다. 사실 요즘처럼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나 공기업이 스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부문의 일자리 이것도 늘리고 기업 일자리도 늘려야 되는데 인턴제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임시직 아닙니까? 채용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인턴제를 많이 늘리고 그 한편에서, 반대편에서는 또 정규직 일자리를 줄여버리고, 감축하고…… 이것을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버지 잘나서, 아버지 직장이 잘나서 자식 인턴 채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배은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턴제도 좀 내실 있게, 질적으로 하면 몰라도 지금은 인턴제에 대한 호응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가서 6개월 동안 있는데 복사만 하라 그러고 청소만 하라 그러니까 막 바로 인턴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사례도 많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기재부차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앞으로 인턴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점을 주겠다, 그리고 채용을 할 때 가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기업에서 채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점을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올해 공기업 채용목표가 몇 명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위원님, 지금 개별적 공기업의 채용 숫자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기업 자체가 그동안에 수차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기업의 인원 감축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의 정원이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철국 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12년까지 저희들이, 그것도 현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명예퇴직이나 또는 자연퇴직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숫자를 중심으로 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강제로 현원을 줄이는 이런 현상은 아닙니다.

○최철국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연감소나 명예퇴직을 활용하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맞습니다.

○최철국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신규 채용을 따로 합니까?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한전 같은 경우도 인턴을 많이 채용하고 거기에 예산을 퍼붓다 보니까 신규 채용은 600명도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이 앞으로 정말 더 늘어서……

○최철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엇박자로 하지 말고 정말 인턴제가 제대로 목표 달성, 전시 행정, 이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아버지 잘나서 자식 인턴제 채용하는 것은 행

복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기업 인원 감축하는 것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전KPS 같은 경우에 해외사업 전문인력이 41명인데 지난해에 1500억 원 벌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2년간 외국에서 정비 의뢰한 사업이 13건에 525억 원이나 되는데 신규인력 채용을 못 하니까 이 사업을 포기해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우리나라 전체 국고가 늘어나겠습니까?

일률적으로 10% 감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업체별로, 공기업체별로 인원이 필요한 곳은 많이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방만한 경영하는 곳은 줄이고 이렇게 돼야지 10% 인원 감축하라, 예산 감축하라 그래서 그것을 성과급으로 반영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재부차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인력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에서도 사실은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어느 한 회사가 상당한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 만약에 경영 파트를 줄일 수 있으면 경영 파트를 줄여서 기술 파트 인력을 늘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철국 위원 아니, 기재부에서 그렇게 내려 보내면, 예를 들어서 한전이 그것을 시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KPS에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10% 감축 안 하고 늘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성과급 받습니까? 그런 현장을 잘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인턴제만 늘리는 게, 채용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최철국 위원 그리고 희망 프로젝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옛날에 해 오던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공공근로사업을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철국 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안 제출 시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 사업계획 만들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만들어서 아마 5월 1일자로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지침을 보낼 예정입니다.

○**최철국 위원**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공공근로사업 문제점 많잖아요?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두고 볼 일이지만 정말 어떻게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관리를 잘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방에 부담금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최철국 위원** 그 부담금을,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서 제대로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예결위에서 많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공공근로 전체의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지방에 부담이 너무 간다고 해서 물량을 상당 부분 줄였고요. 그다음에 지방에서 어려워하던 재료비 부담을 저희들이 재료비 부담비율을 높여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하고 또 지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서도 8000억을, 지방채 인수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완화해 나가자 이렇게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고……

○**최철국 위원** 하여튼 경기가 어렵고 또 부자감세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우에 긴급 고용대책 참고사례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게 있고요, 그다음에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사회서비스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를 하시는데 여당 위원들께서는 삼질 정권이 아니다, 건설 부문에서도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좋다, 요새 삼질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기계로 하기 때문에 삼질 정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시는데 정말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취업유발계수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 부문 그리고 사회서비스 부문 취업유발계수가 얼마 되는지 알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철국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곳에 지금 당장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경제가 제대

로 굴러가는 것 같으면 취업유발계수가 좀 낮더라도 우리 먼 장래를 위해서 SOC사업에 투자도 하고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취업유발계수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하에서 너무 건설 쪽에, SOC 쪽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국무총리실장께서는 ‘백 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설현장도 가 보면 임시직 근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특히 SOC 사업, 거의 기계가 다 하잖아요? 본인이 알기로는 기계도 중국에서 많이 들어온대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비론해 볼 때 OECD국가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해서 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위원님, 저희들이 SOC사업도 필요한 일자리라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일자리 중요성도 인식해서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한 5만 명, 거의 40% 이상 늘려서 사회복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6만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철국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 사업 보면 SOC사업 같은 건설사업에 27조 5000억 원, 사회복지 일자리 1조 5000억 원입니다. 이래 놓고 어떻게 사회복지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전체 사회복지, 사회복지 예산은 한 70조쯤 되고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 일자리만 따지면……

○**최철국 위원** 사회복지 일자리?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최철국 위원** 복지서비스하고는 틀리지요. 지금 사회복지 일자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최철국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九** 최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許範道 委員**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허범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국무총리실장하고 노동부차관한테

문겠습니다.

사실 실업자가 지금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실업이 많지요? 지금 청년실업이 몇 명이라고 알고 계세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청년실업자가 한 37만 5000명 됩니다.

○**許範道 委員** 본 위원이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했을 때도 한 37만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자발적 실업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노동부차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젊은이들의 실업은 많은데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분야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許範道 委員** 왜 그런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고 보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젊은이들이, 대졸자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요즘 물론 취약청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을 한 학생들은 대개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도 한 9만 3000여 개가 있는데……

○**許範道 委員**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중소기업 현장을 잘 모릅니다. 둘째는 월급이 적습니다. 셋째는 직업의 안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자기 실력에 비해서 친구들한테 혹은 주위에 중소기업에 근무하기에는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許範道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게 진단이듯이 이렇게 진단이 나왔다면 거기에 알맞은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첫째 내용은 우리 대졸자들 내지는 대 재학생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약하고 직업의 안정성이 없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체를 기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근무할 때 인근에 있는 대학생들을 버스에 태워서 중

소기업 현장에, 실제로 라인투어와 공장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갔다 와서 대학생들에게 갔다 온 소감을 제가 적으라고 냈더니 평생 중소기업 문턱에는 처음 가 본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체가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우수한 석·박사들 사장이 있고 연구소장이 있고 수출을 1년에 1억 불씩 하는 벤처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고 그 공장 환경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 나도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지요.

오늘은 교육부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내가 총리실장한테 묻는 것은 이것은 노동부나 중소기업청이나 지경부에 한정된 일은 아닐 테고 국무총리실에서—여기 종합점검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대학교 졸업생들·재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그 타이밍에 맞게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안이지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인턴제라든지 공공근로 이것은 정말 격화소양·동족방뇨식의 아무런 의미도 없는, 효과도 없는, 비싼 혈세를 퍼부어 들어가는, 여러분들……

노동부 차관께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가 보신 적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저희는 지방을 실제 많이 방문해서 인턴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許範道 委員**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우리 대졸 혹은 대학 재학생들, 젊은이들이 행정인턴 공공근로하는데 구로역 앞에서 나이 많은 65세, 70세들이 떠 두르고 질서 지키기 하는 옆에서 고개 숙이면서 ‘잘 다녀오세요’…… 그게 공공인턴의 일환이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여기 보세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이름은 그럴 듯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업이나 봤더니 하천 정비·준설, 재해예방, 기업 진입도로, 마을 앞길…… 이것이 희망프로젝트입니까? 시간 때우기식의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어요? 나는 정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정말 숫자 놀음에 불과하고 몇만 명, 몇십만 명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 노동부하고 국무총리실, 교육부 또 지경부, 중소기업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권 총리실장께서 오랫동안 경제부처에 계셔 가지고 코스트

배너피트 어널리시스(Cost-Benefit Analysis)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별 효과도 없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그럴 듯하게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실장 권태신** 지금 일자리를 잃은 저 소득층이, 가장이 일이 없으면 식구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은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에 이것이 당장은 안 되니까 임시방편으로라도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과거의 공공사업처럼 일회성으로 그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許範道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권 실장은 특히 재정부에 오래 계셔 가지고 그런 코스트 개념이 남보다 탁월한 분 아니겠어요? 그것 분석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IT산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IT산업은 우리나라를 지식경제 내지는 고부가가치형의 산업으로 옮겨가는 아주 중요한 산업인데 IT·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에 10억 원 규모의 일자리는 평균 16.5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토목 16.6개, 제조업 10.2개보다는 한 50% 이상의 투자 효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알고 있습니다.

○**許範道 委員** 그런데 이번 추경 편성을 보면 IT 관련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었어요. 8300억 원이 요청이 되었는데 1700억 원으로 한 5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자리를 주면서 효과적인 고용 창출에는, 저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위기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IT라든지 산업 경쟁, 성장동력에 중점을 뒀다 된다는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급한,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IT산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산업이……

○**許範道 委員** 그러니까 이번 추경도 사실은 목표가 일자리 창출 아니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맞습니다.

○**許範道 委員**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로 방향을 잡아줘야지 오히려 근본적인 분야는 소홀히 해 버리고, 홀드(hold)해 버리고, 깎아 버리고 다른 방면으로 간 것은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그런데 위원님, 8700에서 1700을 깎은 것이 아니고 8700 정도는 아마 각 부처가 생각했던 숫자이고 저희들이 2000억 정도를 반영해서 했는데 이 외에 사실상 실제로는 본예산에 R&D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許範道 委員** 잘 알겠습니다.

2010년 예산이 지금 한창 준비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그렇습니다.

○**許範道 委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許範道 委員**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조금 물꼬를 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중에 대기업에 가는 인센티브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약간 있었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는 게 우리 중소기업은 하나의 수단이 아니고 목표가 되어야 되고 가업 승계로서 오랫동안 기술을 축적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대기업에 가기 위한 가점제로 준다 이런 것은, 해당 부처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야지 뭐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무책임한 판단은 해당사업에 대한 또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확실

한 이해와 판단이 덜하다고 봅니다. 그런 자세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간 관계상 고용보험기금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금년도 추경 중에 일반예산이 2400억 원으로 8.4%를 차지한 데에 비해서 오히려 고용보험기금에서 2조 1000억 원으로 74%를 차지한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許範道 委員 그러니까 상당히 기금 의존도가 높은 거지요.

어떻습니까? 노동부차관 입장에서 고용보험기금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고용보험기금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 가지고 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2006년 2007년 2008년 지금 몇 년간 당해연도 수지가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 결산으로 보면 8조 2000억 정도가 적립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추경으로 2조 1000억 정도를 쓰다 보면 한 5조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은 우선 버티지만 앞으로 이런 위기가 더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뭔가 또 별도로 대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許範道 委員 그래서 이 고용보험기금을 장기적으로 볼 때 근로자 전체 임금의 1.15~1.75%의 고용보험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하는 상황을 보면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결과가 만일에 초래된다면 지금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들의 효과가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부담이 되는, 그래서 중소기업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이런 문제라도 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짤 때 일반예산의 부족분과 잘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별히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장이 지금 막 자리 비웠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하고 공공근로, 기왕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상당 부분 할애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공공인턴, 뉴 스타트 프로젝트 이름만 바뀐 여러 가지 소모성 예산의

경향이 참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군 훈련 가 보면 시간 때우기식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마는 굉장히 책임감도 없고 시간 때우기식의 임금만 따 가고 아무런 별 효과도 없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이 보고서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리실에서 조금 더 예의 주도하게 보셔서 이런 일이 조금 지양이 되었으면 하고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容九 허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우리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국무차장입니다.

○김태환 위원 차장이시지요?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예.

○김태환 위원 실장 조금 전에 가셨습니까?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예.

○김태환 위원 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주로 인턴으로 일자리 늘린다, 일자리를 찾는다 이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급하게 하려면 인턴으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정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경제계 기업의 협조를 구하시더라도 좀 내실 있는 인턴프로그램이 돼 줘야지.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6개월 지나면 또 실업자가 되는 거고 또 지금 실업자가 많은 이유도 결국 안정된 직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아지고 하는데 저는 정부가 혼자 힘으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걸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재계하고 협조를 해서 가지고 일부라도 안정적인 직업이 돼 줘야지, 인턴 숫자만 잔뜩 늘린다 해서는 별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또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마는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부가 지난 3월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자료

를 보니까 올해 2월 여성 취업자 수가 작년 동월에 비해 가지고 많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2000명, 여성이 13만 9000명, 남성에 비해서 약 70배가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감소되었다 하는데 박 차장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저희들이 보기에 일단 경기가 악화되면 제일 먼저 해고가 일어나는 데가 임시직, 일용직 또는 자영업…… 지금 이번의 현상 중의 하나가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김태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3월에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45%인데 비해 가지고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6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큰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여성실업 문제, 고용대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성 일자리 감소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여성 가장들의 일자리 상실이 많아서 가정 파괴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데 먼저 간병인이라든지 산모라든지 신생아도우미라든지 아이 돌보미 등 여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지금 1조 2000억인데 1조 5000억 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도 가급적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하도록 행안부하고 그렇게 협조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드는데 거기에도 여성 고용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들을 좀 많이 만들도록 총리실에서 정책 조정

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뭐 시급히 하려면 결국은 그런 분야밖에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저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 이것도 임시직이라든가 일용직에 불과하고 이것도 일종의 비정규직이니까…… 하여튼 시간을 가지시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성고용 대책을 계속해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또 한 가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 지금 고령화 시대인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작년에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또 노동부에 따르면 이중 약 300만 명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박 차장께서는 올해 노인 일자리 목표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위원님, 제가 숫자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11만 7000개인데 올해 4만 3000개를 증가시켜서 16만 개로 일자리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번 추경에 약 320억 추가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320억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4만 3000개를 늘리겠다 하는지 혹시 노동부 차관께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320억 추가 예산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 1166억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넓혀보시겠다는 겁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아마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노인 단기 일자리에 소요되는 예산 같습니다.

○김태환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는 내용 잘 모르고 계신다?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김태환 위원 국무총리실의 차장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1166억 가지고, 320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것으로 4만 3000개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가지고 공공분야에 13만 8000, 민간분야에 2만 2000개의 일자리를 넓힌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공공분야는 그런 대로 지금 계획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민간분야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차장께서 바쁘시지만 대단히, 노인복지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환 위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노인 전용 매장이라든가 식품제조업 식품판매업 이런 일자리 쪽으로 개발이 되고 여기도 일용직이나 일시적인 이런 것보다는 일자리 개발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진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실에서 각별히 여기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면 요즘 어린이들의 유괴 사건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빈발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환경지킴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노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일반적으로 청년실업, 물론 숫자도 많고 거기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취약한 여성의 일자리, 노인 일자리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容九 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주 북구를 민주당 국회의원 김재균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련해서 기재부차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그 사업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아이템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의 기준과 내용은 뭐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저희들은 좀 전의

하나의 기준보다는 중앙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22개를 발굴했구요.

○김재균 위원 22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죄송합니다. 20개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은 144개로 예시를 해서 각 지자체가 그러한 사업 중에서 자기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보고서에 기재한 대로 모든 결정권을 지자체에 대부분 위임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 아닐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시를 20개를 공통적으로 하고 144개 제시하고 이 중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느냐를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체 공통적 기준이라든지 지침은 중앙에서 마련하고 그런 기준하에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사업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과거 IMF 때 대개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가중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혼란이 가중됐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준과 내용이 현실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보조율이 필요한데 보조율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지금 서울은 한 50%로 되어 있고요. 지자체는 80~90 사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보조율을 결정하는데 어떤 기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보조율은 지금 차등 보조율 적용할 때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수준 이런 것을……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사회보장……

○김재균 위원 기준으로 하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조율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지 않더라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오늘 줄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희망근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보조율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균 위원** 전체 보조율을 좀 알고 싶은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오늘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당연히 저소득층과 실업률이 높아서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절실한 지자체의 보조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정 능력이 너무 취약해서 전액 보조가 필요한 지자체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장님께……

취업유발계수라는 것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질의가 장관께 됐는데 사회복지 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예, 저 국무차장입니다.

취업유발계수가, 서비스업 같은 경우 1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투입했을 때 취업유발계수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18.4명……

○**김재균 위원** 사회복지서비스가 29.9, 토목의 경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건설업은 꼭 토목 이렇게 분리하기가…… 건설업으로 보면은……

○**김재균 위원** 건축하고 토목하고 조금 다른데……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토목만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건설업 전체는 16.6명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4대 강 유역의 개발에 있어서 취업유발계수와 관련된 질의를 조금 전에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취업유발계수가 높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4대 강 살리기는 그 나름대로

또 취업뿐만 아니라 다른, 물결 살리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다목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취업계수만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물론 그런 논리가 가능하겠지만 이번 추경에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겨우 3만여 개, 2800억 원을 편성했어요.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가 지금 보다는 많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그다음에 노동부차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금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김재균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3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사업자들과 일자리 창출 간담회가 있었는데 혹시 가 보셨습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직접 참석은 못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다른 직원은 가 봤을까요?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지원대상기업의 조건이 5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 사업의 혜택이 절실한 소규모 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아십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뭐, 그런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들도 지원을 좀 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전국 8500여 개에 달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해서 청년인턴제 임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아울러 지금 전체 중소기업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85.5%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원대상기업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완화를 검

토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더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한 260만여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5인 미만 사업장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폐업했다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파악이 좀 어렵고, 저희가 말하는 중소기업 인턴제는 사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규정도 적용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또 그것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단도 좀 마땅치 않아서 현재는 그 부분까지 확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재균 위원**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는 그날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그 외에 설계사 같은 경우도 5인 미만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직종의 사무실에 인턴 근무가 된다면 매우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숫자가 많다는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접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전문직종에 관련된 분야를 좀 파악해서 가지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구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九** 끝내시겠습니까?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국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회가 처음으로 일자리특위를 만든 걸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자리가 중소기업경쟁력 강화특위이기도 하지만 일자리특위거든요.

이 얘기를 할 때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 우리나라의 고용률 목표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실에 돌아가서 논의하시겠다고 총리께서 그러시고, 윤증현 장관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서 논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고용률 목표를 논의하셨습니까? 아직 못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예, 제가 실무적으로 좀……

○**문국현 위원** 총리님을 잘 모시려면 총리실장

또 차장께서 국회에서 약속하신 것을 팔로우 업(follow-up)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무총리실국무차장 박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윤증현 장관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예.

○**문국현 위원** 또 그 당시에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도 계셨는데, 고용률 목표를 내심으로는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국가적 합의는 안 보셨다면 참 불행한 일인데요. 목표가 없이 측정할 수가 없고, 측정이나 평가가 안 된다면 자원이 더 투입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성과가 없고 발전이 없게 마련인데, 고용률 목표 얼마가 지금 정부 목표입니까? 마음속에 계신 것, 얘기 좀 해주시지요. 세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노동부차관 정종수** 지금 OECD에 보면 평균 고용률이 한 60.6%, 67% 가까이 됩니다.

○**문국현 위원** 제일 많은 나라는 몇 %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제일 많은 나라는 덴마크가 77%, 스웨덴이 한 76% 가까이 됩니다.

○**문국현 위원** 우리나라 때문에 OECD 평균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현재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우리나라 고용률이 최근 2년 사이 몇 % 떨어졌습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최근 지금…… 워낙 저희들이 갑자기 위기가 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매월 좀 떨어지는, 전년 동기 떨어진 게 한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문국현 위원** 글썽요, 3%p면 거의 120만 명 수준이거든요. 4000만 경제활동 가능인구에 3%p 하면 12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서 급격히 자영업이라든가 비정규직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국가 지도자들께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고용과 일자리다, 고용이다, 일자리다……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계셔야 변화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할 때 총리와 윤증현 장관과 이윤호 장관이 검토하시겠다고 그랬으면 곧 뒤따라서 그 팔로우업이 있어야 되겠고, 선진국과의 격차가 왜 생기는가 이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

이번 추경예산 28조 중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얼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저희들이 4조 2000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국현 위원 4조…… 뭐 한 십 몇% 되는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용걸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4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5조 정도를 했는데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게 다 일자리를, 중소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의 예산 전부 다가 일자리를 좀 중점적으로 두고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아무튼 전체 추경이 일자리 예산이라고 부르기에는 일자리 부분이 4조도 안 되요.

그다음에 그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가 희망 프로젝트 아니에요? 아까 논의됐듯이 실업수당이지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업수당의 다른 이름이 희망 프로젝트 아닙니까? 연간 최대 500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억지로 일자리 숫자로 변환시켜 가지고 국민을 혼란시키면 안 되고, 그것만큼은 일자리 통계에서 빠지고 실업수당을 늘렸다, 차상위 여자들을 위한 실업수당을 늘렸다, 이렇게 솔직하게 앞으로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발표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혹시 연간 근로시간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가 노동 관련해서 세계 5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가 연간 근로시간인데 얼마나 됩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노동부 통계로는 2050시간 정도 됩니다.

○문국현 위원 그것은 요즘 줄어서 그렇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문국현 위원 이런 경제위기 상황을 제쳐 놓고 평상시를 본다면 얼마지요? 요즘은 재고도 줄이고 일시적 경기를 타서 그런데요. 평상시가 얼마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지금 이 통계는 작년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문국현 위원 아닙니다. 작년 통계는 2450시간입니다.

○노동부차관 정종수 작년이 한 2200 정도 됐고요.

○문국현 위원 재작년에 보고하신 게 2300이고, 작년은 2400입니다.

올해가 줄고 있지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보다 일 더 하는 나라, 기억나시는 나라,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은 얼마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미국과 일본은 얼마입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멕시코가 한 2000 정도인데, 사실 저희들이 아는 통계로는 저희보다 더 많은 나라는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문국현 위원 없지요. 미국과 일본은 1800시간입니다.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1800시간 됩니다..

○문국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미국보다 한 500~600시간을 더 일하는데, 임금 근로자가 1600만 명 아닙니까? 1600만 명이 2400시간 일하는 것은 2000만 명이 2000시간씩 일하는 것하고 비슷하고, 2200만 명이 1800시간 일하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우선 이 부당한, 초장시간, 과로 특근을 정부가 관리하셔야 됩니다, 선진국처럼.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관리 안 하시니까 산업재해를 아세요, 통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악명 높은 5대, 우리나라의 5대 세계 최대가 있는데 두 번째가 산업재해입니다. 어떻습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지금 0.78% 가까이 됩니다.

○문국현 위원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미국의 6배, 독일의 10배의 사고율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하실 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산업재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지금 추산컨대 한 15조 정도 됩니다.

○문국현 위원 15조, 16조 아닙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문국현 위원 왜 연간 10만 명의 가정을 파괴하시면서, 왜 생산성을 선진국의 반으로 낮추시면서 왜 경제적 부담 15조, 16조를 부담하도록 방치하십니까? 그것 이상의 정부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 15조, 16조도 줄이시고

산업재해율도 현재의 5분의 1로 줄이시고 가정과 피도 막고 노동력의 조기손실도 막으시려면 뭘 관리하셔야 됩니까? 연간 근로시간, 초장시간 특근,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줄 때 관리하셔야 다음번에 성수기에 그것이 추가 고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산업재해는 세계 최악이라고 했는데요. 자영업 비율, 비정규직 비율, 한국보다 높은 나라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자영업자 비율은 물론 우리가 제일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국현 위원 30%가 넘지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비정규직 비율은 사실은……

○문국현 위원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스페인 정도가 우리보다는 아마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스페인이 얼마예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3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국현 위원 OECD 평균이 얼마입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평균 한 17%……

○문국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반이거든요. 아니면 3분의 1이예요.

그러니까 통계에 의한 이런 매니지먼트 바이 스태티스틱(management by statistic)을 하셔야 되고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management by objectives)를 하셔야 됩니다. 목표와 통계 관리 없이 결코 변화 없습니다.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업교육,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200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비해서 몇 %입니까, 산업교육 참여율이?

○노동부차관 정종수 훈련 참여율이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 한 15% 정도……

○문국현 위원 글썄요, 대기업의 10분의 1이 채 안 돼요.

15%라는 거는 양인데 질까지 감안하면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100만, 200만 고학력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으로 오기를 바라며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처럼…… 외국은 대기업의 한 90% 선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올리려면 결국 중소기업을 육체기업에서 지식 근로·기업으로 바뀌어야 되고 고학력 대졸사원들이 마음껏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지만 가

장 중요한 건 과로를 줄이고 산업교육이 대기업 수준으로 가도록 초기에 국가가 도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총리와 기재부장관님과 지경부장관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제안을 공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지난번에는 구두로 해서 아마 팔로우 업(follow-up)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문서로 보내드리니까 보시고 국제적 통계와 왜 이렇게 격차가 있고 격차 관리를 왜 안 하는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있는데 이 격차를 왜 관리를 안 하는가……

그래서 세 분께서 돌아가시면 총리님, 장관님과 즉각 상의해서 가지고 지난번 본회의에서의 약속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견을 공식으로, 문서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용률 목표 80%나 아까 77% 하자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통계를 할 때 경제활동 가능인구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노령인구를 포함하고 있어서 한 5%포인트는 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72%나 70%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 목표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57%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60에서 57%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아까 일회용·한시적 일자리를 포함하지 않는 한 56%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1차 65%로, 2차 70%로 5년, 10년 안에 가겠는가 이것을 국민과 논의하셔야 되고 국민과 목표 공유를 해야 그때 변화가 생깁니다.

세 분 자주 만나 뵙기 바라구요. 이거 선진국이 다 갔고 우리나라의 한 200개 성공한 기업들이 다 이 길로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중시하시고 일자리 나누기 또 그다음에 과로 방지 이것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되고 대학과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식기업 개념을 꼭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容九 문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끝내고 다음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오후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한 3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운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지요.

○강운태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도록…… OECD 각국의 지금 실업률 추이 같은 것을 분석하고 있나요? 매월 실업률 또는 고용률 추이 같은 것을 분석하고 있어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강운태 위원 그 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나라가 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나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

○강운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요.

금년 들어서 말이지요. 매월별로 보니까 독일이 유일하게 실업자가 계속 줄입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까지 월별로 전년 대비해서 보면 계속 실업자가 줄어요. 말하자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금년 1월만 해도 10만 명 실업자가 줄었던 말이지요. 독일이 가장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핀란드, 벨기에, 그리스, 폴란드 이런 나라가 아주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세계 각국이 전부 일자리가 주는데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일자리가 느는가 그 스테디를 해 보라고.

하나 예만 들면, 독일에 어떤 제도가 있느냐면 돈을 빌려주는데…… 고용투자금융이라는 제도를 독일의 연방부흥은행이 하고 있어요.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고용을 할 경우에, 고용도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을 고용할 경우에 1인당 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억 정도 대출해 준단 말이지요. 장기 저리로 10년 분할 상환으로, 그런데 그것도 반으로 나눠서 5000만 원은 후순위채를 사서 자본 확충하도록 하고 5000만 원은 담보를 잡고 빌려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업이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싣자 금으로, 장기 저리 대출받으려면 정규직 사람을 채용해야 가능하단 말이지요. 아주 그걸 많이 하고 있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13억 3000유로니까 1조 7000억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제도가 많다고요, 세계 각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라고요. 이거 보면 답답한 무슨 보고서 만들어 와 가지고 막 한다고 그러지만, 결론적으로 현상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50만 개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OECD 각국의 좋은 수범적 사례를 전부 발췌해 보시고 정리를 해서 우리 특위에 나쁜만 아니라 전 위원들께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

라는데 누가 하시겠어요? 총리실이 하는 겁니까? 노동부가 하는 거예요, 재정부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그거? 총괄은 총리실이 해야 할 것 같고…… 여기에서 확실히 언제까지 하겠다고 좀 대답을 하시라고요. 노동부가 하실래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일자리 나누기·창출과 관련한 그런 사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수단을 한번 죽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운태 위원 5월 말까지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강운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九 강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許範道 委員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강운태 위원님하고 문국현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앉은 차관님들보다도 뒤에 앉아 있는 실무자들에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차관님들이 오늘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문제가 되어 왔던 또 많이 오늘 거론되었던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또 스테이 인 스쿨 프로그램(stay in school program)이라고 해 가지고 학내 교육 프로그램 또 저소득층 취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화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이런 이름이 각자 좀 다릅니다마는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브레인스토밍을 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우리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협의 내지는 설득을 하고 타당성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현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페이지 워킹 하는 사람하고요. 실제로 그걸 팔로우 업 하는 사람하고 달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 나가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내 원래 취지는 이게 아니었는데 얼마나 돈이 낭비가 되고 새고 있고 비능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들 다 국가공무원들로 소정의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안 가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에도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간다고 거창하게, ‘현장에 내가 몇 월 며칠 우리 국장님 모시고 과장님 모시고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잠바 입고 바로 나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실상을 알게 되지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사무관, 과장, 국장 다 했지 않습니까? 정말 나가 보면 이게 아니었는데 너무 너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노동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총리실에도 여기에 점검반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암행 감찰도 하고 이런 점검반……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원래 의도했던 대로, 목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지요. 총리실이 나는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 받고 계획서 설명할 때에는 굉장히 좀 치밀하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지만 인정을……

실제로 우리 각 부처에서, 산자부·중소기업청에는 제가 지식경제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총리실하고 노동부는 제가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밑의 사무관·과장·국장들이 직접 예고 없이 찾아가 봐야 됩니다, 잠바 딱 입고.

그래서 가보면 제가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 안 해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우리 차관들께서 각별히 좀 유념하시고 차관들께서도 바쁘신 일정이지만 이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몇억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직접. 너무 또 거창하게 간다고 사전 연락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운전사하고 기사하고 들이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업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왜 저렇게 자꾸 중언부언 똑같은 소리를 국회의원들이 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容九 허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중소기업 취업근로자·구직자 대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대 및 취업 혁신 정책을 보면 인턴 임금 보조라든지 채용장려금 지원 등으로 주로 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취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 생산 현장은 연구인력 구인난 등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약 20만 명의 중소기업 노동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들도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취업 근로자 직접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예만 간단히 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대상 소득공제 추가혜택을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 시 공공주택 보급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대기업에서 사직한 후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실업급여 6개월 연장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정부에서 중기 취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차관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동부차관 정종수 우선 다른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노동부 소관 말씀을 올리면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도 취업장려수당이라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그런 수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111억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중소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소기업으로 유인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업급여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 이 부분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실업 기간을 중소기업에만 더 연장한다는 것도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업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자칫 실업 상태에 또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유인을 제공해 가지고 신속한 재취업을 좀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 실업 수급 기간 연장과 관련한 법안들이 사실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거는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균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취업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좀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노동부차관 정종수** 예.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容九**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국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또 아니면 화재가, 불난 집처럼 급히 불 끄기에 바쁘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는 많은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고용의 양과 질이 목표로도 잡혀 있지 않고 개선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한 65%는 되어야 되겠는데 56%로 오히려 떨어져 내려가고 비정규직이 늘고 자영업이 늘고 위기에 몰려 있고 자영업의 무급종사자가 200만을 넘고, 이렇게 양과 질에서 악순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급할 때일수록, 폭풍우나 집에 불이 났을 때일수록 오히려 이 폭풍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인가, 어떤 모습의 산업사회나 경제를 창조할 것인가, 어떤 근로자와 그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드릴 것인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태까지 우리가 육체기반 사회였다든가 과로기반 사회였다면 이것을 지식기반 사회로 바꾸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류 대기업을처럼 이번 기회에 300만 중소기업들을 명품화하고 세계화해서 그 종사자들도 지식근로자가 되고 기업도 지식기업이 되고 산업도 지식산업이 되고 그래서 우리보다 60배나 큰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가 한때 종합무역상사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IMF 전후를 통해서 대기업을 집중 지원했듯이 이제 300만 중소기업을 명품화하고 세계화하는 그런 꿈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담당할 인재를 기를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비전과 그런 사회적 합의가 여기에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자꾸 프로그램·프로젝트 제시하시고 아까 희망 프로젝트 같은

것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실업수당으로 해결할 일이에요. 그분들의 빈곤대책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어떻게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할 것이냐, 그래서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은 1~2%, 2~3%밖에 안 되더라도 총요소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3%, 4%의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우리보다 60배 큰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양보를 하고 학계한테 무엇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시민사회 보고 무엇을 도와달라고 그럴 것이냐, 이런 국회와 정부의 과감한 협력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국회는 이번에 원내 대책회의에서 의장과 함께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 각 부처별로 가고 있고 청와대 보고서 보면 프로그램은 큰 프로그램이 6, 7개가 돌아가는데 일자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와 지원책이 없어요.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이 변화가 있으려면 목표와 측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독일은 창조적 정부를 통해서 모든 정부의 조직과 활동과 예산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세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 정부도 무언가 성과 측정을 할 때 조직이나 활동이나 예산이 일자리 창출, 고용률의 양과 질을 얼마나 개선했고 우리 근로자들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여 줬고 우리 중소기업을 명품화하고 세계화했는가, 그것으로 측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容九** 문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아 계신 위원님들은 사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하실 말씀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 국무위원께서 출석하는 문제로 논의를 하다 보니 한 20분 시간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출석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냈습니다. 천정배 위원님, 노영민 위원님, 강성천 위원

님, 정갑윤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문국현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여덟 분이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각 기관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거나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강 성 천	강 운 태	김 기 현	김 용 구
김 재 균	김 태 환	김 학 용	나 성 린
노 영 민	문 국 현	배 영 식	배 은 희
이 진 복	정 갑 윤	천 정 배	최 철 국
허 범 도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권 대 수
전 문 위 원	문 병 철

○정부측 참석자

국무총리실

실 장	권 태 신
국 무 차 장	박 영 준

기획재정부

제 2 차 관	이 용 결
---------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한 석 규
----------	-------

노동부

장 관	이 영 희
차 관	정 중 수
고 용 정 책 관	이 재 갑
고용서비스기획관	이 우 룡

【보고사항】

○위원 보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문 국 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2009. 4. 8